

한국 가족농 재생산체계의 위기

- 가족주기별 분포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권태환 · 장경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의 농촌위기를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의 기초적 조직단위의 차원에서 살펴 보면 문제의 핵심이 가족농의 재생산체계의 와해에 있음이 드러난다. 농촌가구의 재생산주기 단계별 분포를 볼 때, 이른바 축소기 및 해체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가족농 체제는 그 미시조직적 기반이 와해되어 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울러 가족 재생산 주기의 각 단계인 양육 및 교육, 농가 경제 계승과 혼인, 노후 부양 등의 과정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혼돈과 단절이 농촌의 기초조직인 농가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정상적 농가 없는 농촌의 총체적 퇴행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 가족농 재생산체계가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촌의 현실은 기초 생산·생활조직의 차원에서 급격한 해체는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조직 차원에서의 농촌문제의 대처는 기존 농가 재생산 주기의 붕괴에 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대응요법을 동원해 가족농 해체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보완적 조치로서 새로운 협업적 또는 기업적 경영체계의 확립에 관계된 사회적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포철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의 일부를 반영해 작성되었다. 본고가 한국인구학회 1995년도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을 때 귀중한 참고말씀을 준 지정논평자 안호룡, 한경혜 교수와 다른 많은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연구조교로서 많은 도움을 준 박경숙, 이윤석, 정동일씨에게도 감사드린다.

I. 농촌·농업·농민의 위기

급속한 산업화의 부산물로서 1980년대부터 이미 지적되어 오던 한국 농촌의 위기는 1993년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일환으로 쌀시장 개방이 결정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 수천년 동안 한민족의 경제, 사회, 문화를 떠받쳐온 농촌이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구조적 위기에 처해 존망이 불확실한 지경이 되어 버렸다. 이 같은 농촌 위기의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들의 분석 자체가 농민들의 현실 정서와 괴리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들이 농촌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농촌 위기에 대한 오진의 소지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분석대상의 차원에서는 농업 문제와 농민 문제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선이 있고, 분석단위의 차원에서는 농가 문제와 지역공동체 문제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선이 있다. 농촌은 경제적 차원에서는 주로 농업생산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physical space)으로 인식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농민들이 물질적 생산·소비 활동에 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고 정치적 욕구를 표현·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형성·유지·변화되는 사회생태학적 실재(socio-ecological entity)로서 파악된다. 그리고 농업과 농민생활은 모두 농촌의 두 기초 조직단위인 농가(peasant household)와 마을공동체(village community)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농가가 농지 소유·경작의 단위이자 생계소비 등 일상생활의 단위로서 작용한다면, 마을공동체는 농업생산 과정에서의 작업 협력, 기반시설 유지, 재화 교환 단위이자 사회·문화적 상호작용과 정치·행정적 조직화의 단위로서 작용한다.

농업 위기와 농민 위기의 구분에 대해 부연하면, 농업 위기는 농촌 생산체계(rural production system)의 위기로, 농민 위기는 농촌재생산 체계(rural reproduction system)의 위기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생산체계의 위기는 농촌 내부조건이나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 생산성 하락, 채산성 악화 등이 누적되어 농업의 경제적 자생력이 심하게 침하되고 경제구조상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다. 재생산체계의 위기는 역시 농촌 내부조건이나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 농촌의 기초 조직들, 즉 농가와

마을공동체의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유지 기반들이 와해되어 감으로써 농민들의 사회적 존재성이 변질·소멸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생산체계의 위기는 농가와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연속성이 구조적으로 와해됨으로써 농촌의 사회적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다.

농업의 위기와 농민의 위기는 궁극적으로는 서로 밀접히 반영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농업 문제 자체도 개별 농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구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생태학적 농민 문제도 개별 농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마을공동체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구분될 수 있다. 농가 혹은 마을공동체 중 어느 수준에서 발생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누적되면 결국 농촌 전체의 위기가 야기되겠지만, 위기의 분석과 처방에 있어 원인이 되는 문제의 내용과 발생단위를 면밀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990년대 초의 한국 농촌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농업·농민이라는 문제영역과 농가·마을공동체라는 문제단위의 조합에 의해 구성되는 네가지 차원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막연하나마 얻는 인상은 농촌 문제가 네가지 차원 모두에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권태환, 1992; 장경섭, 1995). 그렇지만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농민 위기, 즉 농가와 마을공동체의 재생산체계의 위기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었고 문제의 설정 및 분석이 충분히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느낌도 아울러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학, 인류학, 인구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농촌 기초조직들의 재생산체계의 위기에 관한 좀 더 활발한 연구들이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농가의 조직적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농촌 위기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농가 재생산 주기 중심의 농촌문제 분석에 직·간접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보완적으로 고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수집한 자료들을 재분석 또는 재해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¹⁾ 이같

1) 이를 위해 분석 또는 소개되는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89년 실시한 「한국가족기능연구」(공세권 외, 1990),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1986년 실시한 「한국의 가족생활주기 연구」(공세권 외, 1987),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가 1987년 실시한 「산

은 자료들에 대한 해석은 부분적으로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에서 현지 농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실태와 대비되어 걸러진 것이다.²⁾ 이 글은 가족농 재생산체계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한국 농촌문제의 미시조직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II. 농가 재생산 주기 검토의 의의

농가의 재생산체계는 가족 일반의 경우처럼 출산 및 사회화(procreation and socialization), 계승(succession), 노후부양(old-age support)의 3단계 주기로 상정할 수 있다. 출산 및 사회화는 아동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서 장래의 성인 가족원으로서 준비시키는 것이고, 계승은 성년 남녀가 주로 혼인 및 생업승계를 통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며, 노후부양은 가업을 물려주고 은퇴한 노부모가 이를 승계한 자녀로부터 부양받는 것이다. 이같은 가족 재생산 주기(family reproduction cycle)의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차질이 발생하면 농가(가족)의 연속성은 깨지게 된다. 즉 출산에 완전히 실패하거나 아동을 농민으로서 사회화시키는데 실패하거나, 성인자녀의 혼인과 농사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자녀에 의한 노후 부양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해당 농가는 그 사회·경제적 성격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재생산 주기 각 단계의 단절은 곧 그 다음 단계의 연쇄적 단절을 가지고 오게 된다. 즉 아동 출산·사회화의 실패는 계승의 실패로, 계승의 실패는 노후 부양의 실패로 이어진다.

농가 재생산체계, 특히 재생산 주기를 중심으로 농촌 위기를 진단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농촌 위기라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그 미시적 기초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농촌 문제로 뭉뚱거려지는 많은 문제들을 개별 농가 수준에서의 재생산

지 및 산촌개발을 위한 발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인발연, 1988), 한국여성개발원이 1992년 실시한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변화순, 1993),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가 1993년 실시한 「청소년의 의식 및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농문연, 1994),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통계청, 1994) 등이다.

2) 면담의 결과는 특히 노인가구의 문제를 중심으로 별도의 논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주기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배치해서 구체적인 분석이나 평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둘째, 농민 자신들의 인식 및 행위 단위인 가족의 조직적 재생산을 다룸으로써 농민들에 의해 체감되는 농촌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다룰 수 있다. 셋째, 농가의 조직적 연속성(organizational continuity)이라는 측면에서 농촌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정태적이고 단기적인 현황 분석을 넘어서 동태적이고 장기적인 추세 파악까지 가능하다. 농가 재생산 주기별로 나타나는 문제는 분석 시점 현재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여파가 구체적인 조직 재생산의 실패로 나타날 미래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네째, 기존 농촌 연구의 주류인 경제학적 접근에서 농촌의 생산조직 및 생활단위로서의 농가의 사회적 중요성이 흔히 간과되는 추세에 미루어 농촌 문제에 대한 긴요한 보완적 논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적 농촌 연구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노동, 자본의 즉각적인 양적 균형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지만 현재의 농업 위기가 오히려 생산기술 및 조직에 더욱 중요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산조직으로서의 농가들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지 못함으로써 이른바 ‘가족 생산양식(familial mode of production)’의 와해가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농가 재생산 주기에 대한 분석은 농업 위기 진단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³⁾

이같은 특징을 갖는 농가 재생산 주기의 연구는 농촌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관한 기존 논의를 주도해 온 이른바 농민층 분해론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농민층의 양극분해론, 중농표준화론, 전층하향분해론 등은 농민층 분해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변화의 과정·결과로서는 경작(경영)규모에 공통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데 농민층 분해 과정·결과의 질적 측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대농·농업노동자, 중농, 혹은 영세농들의 전국적 발생이 단순히 외부적으로 주어진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논의를 단순화시키기가 쉽다. 그러나 기존의 농민층이

3) 이같은 비판은 사회학적 입장에서 뿐 아니라 이른바 차야노비안 맑시즘(Chayanovian Marxism)의 입장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차야노프(Chayanov, 1986)는 농민의 전통적 생산활동이 주어진 가족노동력과 가족의 복지욕구에 긴밀히 조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함으로써 농민 가족경제의 사회조직적 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비판으로 김수석(1994)의 논문 참조.

분해되어 새로운 사회적 성격을 갖는 농민층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농촌의 기초 조직단위로서의 농가가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직(농가) 재생산 주기상의 다양한 변화들은 기존 농민층이 농가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해되며 또 그 분해의 결과 어떠한 새로운 조직 속으로 농촌인구가 편입되어 가는지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동안의 농촌연구에서 농가 재생산체계나 재생산 주기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연구진(최양부, 1986; 최양부·오내원, 1992)은 '농가생애주기(farm household life cycle)'에 관한 가설을 상정하고 이를 통해 농촌 문제를 장기적으로 분석해 왔다. 변화순(1993), 김홍주(1992), 설동훈(1993) 등에 의해서도 가족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 유형별 분포가 제시되고 이를 기초로 한 농촌 문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농가 재생산(생활) 주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결국 농가 재생산 주기를 바탕으로 하는 다수의 조사 및 분석 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가운데 주요한 것들은 본 논문에서 소개될 것이다.

III. 재생산 주기별 농가 분포

농가 재생산 주기의 단계별 문제점들을 점검하기에 앞서 현재 한국 농촌 가구들의 분포를 재생산 주기를 기준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재생산 주기의 단계별 문제점이 주로 농가 재생산의 질적 실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재생산 주기의 단계별 분포는 그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재생산 주기의 특정 단계에 속한 농가수가 지나치게 작으면 시간 경과에 따라 후속 단계들의 농가수도 감소하게 되어 있으며, 결국 주기 단계별 생활실태의 양호 여부에 상관없이 재생산체계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산 주기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현실적 비중은 그 단계에 처한 농가들의 수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재생산 주기의 특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부 사소한 문제점들이라도 그 단계에 놓인 농가들의 수나 비율이 지대하면 문제의 현실적 여파가 훨씬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재생산 주기의 특정 단계에 속한 농가들의 수가 과소한 경우 그 단계의 생활문제들이 적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주기의 농가수는 더욱 줄어들어 재생산체계가 근본적

으로 와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연구들에서처럼 농촌 인구의 분포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작규모별 등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농촌 문제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농가 재생산 주기의 단계별 분포를 통해서 보면 현재의 가족 중심적 농업 생산체계하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어떤 시기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측케 하여 준다.

그동안의 국내 조사·연구 결과들 가운데 농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하 인보연)의 연구진(공세권 외, 1987)에 의한 전국적 가족생활주기 조사는 1986년을 기준으로 농촌 가구들의 재생산 주기 단계별 분포를 자세히 밝혀냈다. 공세권은 가구내 세대집단의 수와 가족주기 단계를 조합해서 미혼가구, 1세대 형성가족, 2세대 팽창가족, 3세대 가족, 2세대 축소가족, 1세대 축소가족, 해체된 가족 등으로 가족(가구)을 분류했다(표 1 참조). 농촌(읍·면 지역)의 경우 전국이나 도시와 비교해서 두드러진 점은 1세대 형성가족, 2세대 팽창가족 등 가족 재생산 주기상 앞으로 가족 규모를 늘리고 가족 구조를 완결시켜 나갈 가구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반면에 3세대 가족, 2세대 축소가족, 1세대 축소가족, 해체형 가족 등 앞으로 가족 규모가 줄어들고 가족 구조가 해체될 과정에 놓인 가구들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이미 30여년간의 급속한 이농으로 농촌 인구규모

<표 1> 가족생활주기별 가구분포(1986년)

	전국	도시	(서울)	농촌
전체	100.0 (3,400)	100.0 (2,328)	100.0 (808)	100.0 (1,072)
미혼가구	8.1	9.8	(9.8)	4.3
1세대 형성가족	4.0	5.0	(5.1)	1.8
2세대 팽창가족	50.3	56.4	(57.3)	36.9
3세대 가족	13.5	10.8	(10.5)	19.3
2세대 축소가족	16.8	13.0	(11.8)	25.0
1세대 축소가족	4.0	2.4	(2.5)	7.5
해체형 가구	3.4	2.6	(2.1)	5.1

자료: 『한국의 가족생활주기 연구』 결과보고서(공세권 외, 1987: 52).

및 가구수가 지나치게 빨리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는 설사 이농 속도가 완화되더라도 농촌 가구수 특히 정상적인 농업 생산조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농가수가 가족주기의 동학에 의해 급감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우기 이러한 농가 유형별 비율은 실질적으로 도시형 인구인 읍지역의 가구들을 포함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실제보다 완화되어 보이는 것이다.

1987년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이하 인발연)의 전국 농·산·어촌 조사에서 농촌을 다시 일반 농촌, 산촌, 근교 농촌으로 나누어 가구주 연령과 가족구조를 대비해 본 바에 따르면 재생산체계의 위기가 세 지역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표 2 참조). 다만 65세 이상 가구주의 1세대 가족 비율이 일반 농촌에서 48%로 다른 지역보다 4~5% 정도 높았다. 대신 65세 이상 가구주의 3세대 가족 비율은 일반 농촌에서 18.4%로 다른 지역보다 4% 가량 낮았다. 그리고 2세대 가족의 비율은 모든 가구주 연령층에서 지역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특히 가족해체에 놓인 독신·부부노인들의 문제가 모든 종류의 농촌에서 심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족주기상으로 축소·해체에 있는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농촌의 경제적 생산 및 사회·문화적 생활 단위가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89년 조사·수집한 「한국가족기능연구」 자료 가운데 농촌지역(면부)에 관한 부분을 따로 분리해 본 연구자들이 직접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표 3 참조).

1989년 농촌가구의 재생산주기 단계별 분포는 앞서 소개한 인보연의 1986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축소기에 들어선 가구의 비율이 불과 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⁵⁾ 그 이후 본고가 집필되는 1995년 현

4) 같은 자료를 설동훈(1993: 170)이 가구주의 연령과 세대수, 가족구성원 관계, 핵가족-확대가족 구분 등을 각각 대비시켜 재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도 시사적이다. 우선 가족 유형을 보면 도시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1세대 가족, 부부만으로 혹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이른바 핵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세대 가족, 부부가족 및 단신가구, 일반적인 핵가족의 가구주의 연령이 다른 유형의 가족들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 사실에서 추론되는 것은 농촌 가족이 노인을 가구주로서 해서 규모가 축소되고 구조가 불완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5) 위에 소개된 인보연의 1986년 자료는 농촌지역에 면부뿐 아니라 읍부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두 기간 사이의 변화가 실제보다 약간 높게 관찰된 것

<표 2> 농촌·산촌·근교 농촌의 가구주 연령과 세대 구성(1987년)

세대수	농촌				산촌				근교 농촌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			
	45세 미만	45~64세	65세 이상	계	45세 미만	45~64세	65세 이상	계	45세 미만	45~64세	65세 이상	계
가구수(가구)												
계	1,062	2,401	560	721	1,528	339	454	937	194			
1세대	31	460	269	14	281	146	11	138	87			
2세대	621	1,446	172	407	920	98	261	571	61			
3세대	406	467	103	298	311	77	178	213	43			
기타	4	28	16	2	16	18	4	15	3			
<구성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세대	2.9	19.2	48.0	1.9	18.4	43.1	2.4	14.7	44.8			
2세대	58.5	60.2	30.7	56.4	60.2	28.9	57.5	60.9	31.4			
3세대	38.2	19.5	18.4	41.4	20.4	22.7	39.2	22.7	22.2			
기타	0.4	1.1	2.9	0.3	1.0	5.3	0.9	1.7	1.6			

주: 기타는 조손(祖孫)세대와 같은 중간세대 결혼가구, 비혈연가구, 4세대 이상 가구를 포함.
 자료: 「산지 및 산촌개발을 위한 발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인발연, 1988, Pp.662~4)

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1989년 자료는 가구주 3세대의 동거 및 세대 외부로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1986년 자료와 달리 3세대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다.

재까지의 6년 사이에는 농가의 축소·해체가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 순수농촌지역(면부)의 가족생활주기별 가구분포(1989)

가구주 중심 가족생활주기	분 포 (%)
1세대 형성기	3 (0.5)
2세대 팽창기	26 (4.5)
2세대 최대기	239 (41.2)
2세대 축소기	253 (43.6)
1세대 축소기	28 (4.8)
해체(독신)기	31 (5.3)

이처럼 가족주기상 축소·해체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은 여성, 특히 농촌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특히 높다. 권태환과 박영진이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촌 여성가구주의 82.3%가 45세 이상의 연령층에 속하고 4/5 정도가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로 나타났다(권태환·박영진, 1993: 57). 이들의 분석에서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가구 형태를 보면(표 4 참조), 농촌지역(군부)에서는 45세 이상 여성가구주 가구의 49.1%가 독신가구이며, 28.3%가 미혼자녀와의 동거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45세 이상 여성가구주 가구의 26.5%가 독신가구이고, 46.0%가 미혼자녀와의 동거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에서 농촌 가족의 구조적 해체에 따른 고통이 여성들에게 특히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1992년 농촌조사 자료를 변화순(1993)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위에 소개한 두 조사연구의 시점인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5년여의 시간 경과를 반영해 농촌 가족의 축소·해체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표 5 참조). 변화순은 가족주기와 농가의 경제적 성격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특히 전업농가가 겸업농가에 비해 축소기, 축소완료기, 또는 해체기에 있는 빈도가 높았다. 이는 농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많을수록 농가의 축소·해체가 빨라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역으로 축소·해체기에 놓일수록 농업 이외의 생계수단을 찾기가 어려워진

<표 4>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가구형태분포(1990)

(단위: %)

가구주연령/가구형태	전 국	시 부	군 부
30세 미만			
1세대 부부가족	0.5	0.6	0.2
기타	27.9	29.3	14.6
2세대 부부+미혼자녀가족	0.7	0.6	1.4
편부모+미혼자녀가족	6.1	5.7	10.4
기 타	2.1	2.1	2.4
3세대 부부+자녀+부(모)	0.1	0.1	0.0
3세대 이상 기타	0.4	0.4	0.4
1인 가구	48.2	48.2	47.8
기타 비친족가구	13.9	13.0	21.8
30세-44세			
1세대 부부가족	0.3	0.3	0.2
기타	2.5	2.8	0.6
2세대 부부+미혼자녀가족	1.6	1.7	1.1
편부모+미혼자녀가족	57.6	56.5	64.6
기 타	4.8	5.0	3.7
3세대 부부+자녀+부(모)	0.4	0.3	0.8
3세대 이상 기타	5.4	4.8	8.8
1인 가구	24.7	26.2	15.5
기타 비친족가구	2.6	2.2	4.8
45세 이상			
1세대 부부가족	0.2	0.2	0.2
기타	0.4	0.4	0.3
2세대 부부+미혼자녀가족	0.4	0.4	0.0
편부모+미혼자녀가족	39.2	46.0	28.3
기 타	10.4	11.0	9.3
3세대 부부+자녀+부(모)	4.7	5.3	3.6
3세대 이상 기타	7.9	8.3	7.4
1인 가구	35.2	26.5	49.1
기타 비친족가구	1.7	1.7	1.7

주: 각 연령집단별 표본 여성가구주가구의 수는 다음과 같다.

30세 미만 - 전국(6,685) 시부(6,060) 군부(625)

30세-44세 - 전국(7,942) 시부(6,800) 군부(1,142)

45세 이상 - 전국(21,534) 시부(13,526) 군부(8,278)

자료: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분석 결과(권태환·박영진, 1993: 58).

<표 5> 농가형태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전업농가	겸업농가	비농가	계
가 족 형 태	핵가족	353 (66.9)	125 (59.8)	98 (64.5)	576 (64.8)
	1세대가족	150 (28.4)	27 (12.9)	22 (14.5)	199 (22.4)
	2세대가족	203 (38.4)	98 (46.9)	76 (50.0)	377 (42.4)
	직계가족	116 (22.0)	65 (31.1)	21 (13.8)	202 (22.7)
	기타가구	35 (6.6)	13 (6.2)	14 (9.2)	62 (7.0)
	단독가구	24 (4.5)	6 (2.9)	19 (12.5)	49 (5.5)
가 족 주 기	형성기	8 (1.5)	4 (1.9)	5 (3.3)	17 (1.9)
	확대기	13 (2.5)	11 (5.3)	13 (8.6)	37 (4.2)
	확대완료기	192 (36.4)	101 (48.3)	72 (47.4)	365 (41.1)
	축소기	245 (46.4)	74 (35.4)	30 (19.7)	349 (39.3)
	축소완료기	49 (9.3)	17 (8.1)	13 (8.6)	79 (8.9)
	해체기	21 (4.0)	2 (1.0)	19(12.5)	42 (4.7)
전 체	528(100.0)	209(100.0)	152(100.0)	889(100.0)	

자료: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결과(변화순, 1993: 131).

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한국의 전업농이란 생산조직으로서의 농가의 인적 구성이 충실한 집단에 의해 충원되기 보다는 오히려 인적 구성이 취약한 집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구성되는 것이다.

이같은 농가의 축소·해체 현상은 개별 부락에 대한 사례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김홍주(1992)가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을 1991년에 조사한 결과와 농경연 연구진(최양부·오내원, 1992)이 충남 부여군의 한 마을을 1992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가의 축소·해체 현상은 전국적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적 추세보다 더욱 두드러진다. 그래서 김홍주(1992: 117)는 “농촌지역의 가족은 양질의 인적 자원이 재생산될 수 있는 토대가 거의 와해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최양부·오내원(1992: 179)은 “농촌가족의 ‘F-사이클’ 단절에 의한 노인부부 가족화와 마을의 노인층화는 농업경제와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이 심각한 해체와 붕괴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암

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한다.

아래에서는 농가 재생산 주기의 각 단계인 아동 양육 및 교육, 농가경제 계승, 혼인과 결혼생활에 대해 혼돈과 단절을 야기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농가 재생산 주기의 최종 단계인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지만 노후생활 양상이 노인세대의 현재의 생활만족도뿐 아니라 청년세대의 농민으로서의 장기적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감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족농의 유지에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⁶⁾ 본 연구진은 농민의 노후생활 문제를 가족농 재생산 체계에 관련시켜 분석하는 별도의 연구논문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IV. 농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문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농가 재생산 주기의 교란요인들에 대한 검토는 우선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 시작해서 지역공동체 차원, 그리고 사회 및 국가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이는 지역공동체와 그리고 사회·국가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가족 차원의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농가 재생산의 위기를 가져오는 환경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동 양육 및 교육문제는 농촌 가족 생활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음이 그간의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김일철 등(1993: 29)에 의해 조사된 바에 따르면 농촌에서 가족에 관련해 첫번째 어려운 문제로 42.1%가 자녀의 교육문제를 꼽았고, 그외 건강문제(20.9%), 빈곤문제(13.6%), 자녀의 결혼문제(12.4%), 노인부양(5.7%) 등을 들었다. 자녀의 교육문제를 두번째 어려운 문제로 꼽은 사람도 13.0%에 달해 과반수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진이 보사연의 1989년 「한국가족기능연구」 자료 중 먼부 가족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났다. 거의 대다수 농민들이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자녀가 떨어져 있는 가구주 1인가구(87.5%)와 가구주 부부가구(78.0%)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의 구체적

6) 농촌 노인들의 생활·부양 실태에 관한 최근의 주요 연구들로는 이가옥 외(1989a, 1989b), 김용석 외(1993), 조완규(1994) 등을 들 수 있다.

내용으로는 학교교육과 자녀양육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구주 1인가구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의 심각성이 가장 컸다. 그런데 이같은 농민가족의 자녀 문제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교육을 위한 능동적 기능과 역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농민가족의 아동 양육 및 교육상의 문제는 인구구성상의 문제, 경제적 문제, 문화적 문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인구구성상의 문제는 우선 농촌지역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렵다”는 말처럼 신생아수가 급감했고, 이미 태어난 아동, 청소년들도 성인이 되기 전에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농촌지역 내부에서 미래에 농민이 될 충분한 인구를 아예 물리적 차원에서조차 확보할 수가 없다는 문제이다. 신생아수가 급감한 것은, 물론 출산연령기에 있는 젊은 부인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농민가족의 출산율이 도시인가족의 출산율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락했기 때문이다.⁷⁾ 보사연의 1991년 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군부)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로 도시지역의 1.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인구대체율(population replacement level)조차 밑돌고 있다(공세권 외, 1992). 더우기 농촌의 가임연령층 여성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농촌 조출산율은 오히려 도시보다 낮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 도중에 농촌을 떠나는 것은 부모가 데리고 도시로 이주를 했거나 교육 등을 위해 홀로 도시로 보내지기 때문인데 뒤이어 설명되겠지만 이 두가지 현상이 모두 빈번하다.

경제적 문제는 두말할 필요없이 과다한 양육·교육비 지출이 주는 재정적 어려움을 말한다. 농가의 가계비 지출 내역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제일 높고(인발연, 1988: 128), 이 비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도시 가구의 그것보다 꾸준히 높았지만 최근 들어 그 차이는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1994: 131). 그런데 농가의 교육비 부담이 과중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농가 자녀의 교육이 탈농촌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교육이 탈농촌화함은 농민들의 자녀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자녀들을 농민으로 만드는 데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도시 소재 상급학

7) 출산연령기에 있는 젊은 부인의 수가 적은 것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농촌의 청년인구가 남, 녀 가릴 것 없이 집단적으로 이농을 한 결과이다. 그리고 농촌 출산율이 급락한 것은 바로 뒤이어 설명할 새로운 아동기 이념의 확산과 자녀들을 통한 도시지향적 계층상승 기대감(장경섭, 1995)이 작용하여 자녀 수의 현실적 의미가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교 진학을 이상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녀들이 취학을 위해 도시로 통학할 때의 교통비나 도시에 거주할 때의 전·월세 또는 하숙비의 부담이 학교 납입금과 부대 경비에 더해질 때, 농민들의 가계는 엄청난 곤란을 겪어 부채에 쪼들리고 농지와 가축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아예 보편적이기까지 하다(설동훈, 1993; 김홍주, 1992). 교육을 위해 도시로 간 자녀들이 졸업 후 농촌으로 돌아와 농사를 계승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할 뿐더러 부모들이 바라지도 않는 일이며,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부모마저 농업 소득의 열악성과 별거 자녀 생활지원의 지리적 고충을 감안해 아예 이농해 버리는 일이 잦다.

이같은 농가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은 그래도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지만 농가 재생산을 위해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아동 양육·교육에 관련된 가족내 문화적 환경이다. 농가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특히 아들) 필요성을 가계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다(공세권 외, 1992: 123~35). 그러나 가정내의 실제 아동 양육·교육 상황은 진정한 의미의 가계 계승의 실현 가능성을 극히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가족기능연구』(1989)의 원자료 중 농촌지역(면부)을 필자들이 직접 분석한 <표 6>을 보면 상당수의 농가에서 아동들에 대한 학습 및 생활태도 지도가 아예 전적으로 포기되어진 상태이고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호자가 전혀 들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많은 아동들은 가족 중 아무런 대화상대도 찾기 어렵고 아무에게서도 용돈을 타지 못하는 경우조차 빈번하다. 이같은 문제들이 자녀가 떨어져 생활하는 가구주 단독가구나 가구주 부부가구에 특히 심각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으나 핵가족 가구와 확대가족 가구에서도 심각한 수준임은 다를 바 없다. 자녀 학습지도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30.7%, 확대가족 가구의 38.9%가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아무나 한다든지, 누가 하는지 모른다든지 하는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가구들을 합하면 농가의 과반수가 자녀들의 학습 지도를 유기하는 실정이다. 자녀 학교에의 출입 비율을 보면, 그렇다고 학교 교육에라도 충분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겨를도 없다. 자녀 생활태도 지도는 핵가족 가구와 확대가족 가구의 경우, 학습지도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그 비율들 역시 우려할 정도이다. 자녀들에게 대화 상대가 되어 준다거나 용돈을 준다든지 하는 일들도 각 가구 유형별 비율과 상대적 차이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같

<표 6> 농촌가정의 자녀지도

	가구주1인가구	가구주부부가구	핵가족가구	확대가족가구
자녀학습지도				
부인	3 (5.0)	4 (3.8)	109(36.3)	46(36.5)
남편	1 (1.7)	2 (1.9)	19 (6.3)	6 (4.8)
아무나	2 (3.3)	10 (9.5)	57(19.0)	18(14.3)
안한다	50(83.3)	81(77.1)	92(30.7)	49(38.9)
모른다	0 (0.0)	1 (1.0)	16 (5.3)	5 (4.0)
비해당	3 (5.0)	5 (4.8)	1 (0.3)	
자녀생활태도지도				
부인	9(15.0)	30(28.6)	204(68.0)	75(59.5)
남편	1 (1.7)	12(11.4)	33(11.0)	12 (9.5)
아무나	0 (0.0)	0 (0.0)	8 (2.7)	5 (4.0)
안한다	47(78.3)	58(55.2)	39(13.0)	27(21.4)
모른다	0 (0.0)	0 (0.0)	14 (4.7)	4 (3.2)
비해당	3 (5.0)	5 (4.8)	1 (0.3)	0 (0.0)
자녀와의 대화상대				
부인	11(18.3)	37(35.2)	230(76.2)	78(61.9)
남편	1 (1.7)	6 (5.7)	16 (5.3)	10 (7.9)
아무나	0 (0.0)	1 (1.0)	2 (0.7)	1 (0.8)
안한다	44(73.3)	56(53.3)	36(12.0)	29(23.0)
모른다	0 (0.0)	0 (0.0)	14 (4.7)	4 (3.2)
비해당	3 (5.0)	5 (4.8)	1 (0.3)	0 (0.0)
자녀용돈지급				
부인	4 (6.7)	17(16.2)	184(61.3)	68(54.0)
남편	2 (3.3)	14(13.3)	44(14.7)	18(14.3)
아무나	0 (0.0)	1 (1.0)	2 (0.7)	0 (0.0)
안한다	50(83.3)	66(62.9)	46(15.3)	29(23.0)
모른다	0 (0.0)	0 (0.0)	19 (6.3)	6 (4.8)
비해당	3 (5.0)	5 (4.8)	1 (0.3)	0 (0.0)
학교출입				
부인	5 (8.3)	18(17.1)	184(61.3)	64(50.8)
남편	0 (0.0)	3 (2.9)	12 (4.0)	11 (8.7)
아무나	0 (0.0)	0 (0.0)	0 (0.0)	0 (0.0)
안한다	52(86.7)	79(75.2)	82(27.3)	42(33.3)
모른다	0 (0.0)	0 (0.0)	21 (7.0)	7 (5.6)
비해당	3 (5.0)	5 (4.8)	1 (0.3)	0 (0.0)

은 현실을 반영해 농촌 청소년들은 도시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의 관심 부족에 대한 불만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한 조사에서 드러났다(이화여대 농촌문제연구소, 1994).

이처럼 농가 아동들의 생활태도 및 학습 지도와 일상적 보살핌이 가족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학습 지도의 경우처럼) 가족들의 기능과 여유가 따르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측면은 아동 사회화의 문화적 환경에 가족들이 제대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김홍주, 1992: 122~24). 아동들이 학교에서 습득하거나 텔레비전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입되는 사회적 가치들은 철저하게 도시 지향적 혹은 도시 미화적이고 기존 농촌의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암묵적으로 경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직업활동에 관한 것이든 여가에 관한 것이든 농가의 어른들은 아동들이 어떠한 기능과 가치관을 습득해 나가는지에 대해 문외한이며 방관자로서 남아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 가족농의 지휘자로서의 농가 부모의 권위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동들이 농가 계승을 위한 가치와 기능을 습득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조옥라, 1990: 292).

여기에 덧붙여 대중매체와 학교를 통해서 서서히 스며든 이른바 서구식 '아동기(childhood)'의 이데올로기가 전통적 아동 훈육의 관습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동들이 갈등과 소외로 점철된 성인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서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서구 핵가족형 관념(cf. Aries, 1962)은 아동들이 이른 시기부터 어른들 틈에 끼여 가족 단위의 사회·문화·생산 활동을 체득해 나가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과 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가지 상반된 아동 사회화 관념 사이에서 어른들 자신이 내면적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른과 아동이 서로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발달시킴으로써 표면적 갈등이 일기조차 한다. 막상 부모들이 서구적 아동기의 관념을 받아들이다라도 가족 단위의 여가 문화가 없고 여가 시간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들의 서정적 보호 역할을 수행하기가 여의치 않다(김홍주, 1992; 조옥라, 1990; 변화순, 1993).

나아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자녀들이 외지로 떠나게 되면 이들의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의 의미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최소한 가족농보다는 나은 삶의 기회를 개척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서 자신들 역할의 한계를 자연스럽게 자인하게 된다. 자작 소농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패배감이 농민들에게 팽배해 있고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은 세대간 직업전환 및 계층상승의 핵심 기제로서 인식되는 것이다(최양부·오내원, 1992; 김홍주, 1992; 변화순, 1993).

1993년 실시된 이화여대 농촌문제연구소(이하 농문연)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농촌 청소년 가운데 남자는 3%, 여자는 0%가 장래 직업으로서 농업을 희망했다(표 7a 참조). 청소년의 부모 가운데 농업을 아들의 장래 직업으로서 희망하는 비율은 2%였고, 딸의 장래 직업으로서 희망하는 비율은 1%였다(표 7b 참조). 농촌의 청소년과 부모는 적어도 농업을 대물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치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 청소년이나 부모가 각각 자신과 자녀의 장래 직업으로서 농업을 희망하는 사례는 전무했다. 즉 '돌아오는 농촌'의 구호에 호응해 새로운 영농계승자가 될 도시인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촌 아동의 사회화가 개별 농가 수준에서 가족농의 세대간 전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공동체나 사회·국가가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지도 못하다. 과거 청소년들에 대해 중요한 사회 통제 및 훈육의 기능을 했던 친족이나 이웃공동체가 급격히 해체·약화된 가운데 새로운 집단적 사회화 기제가 자체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방자치체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의하달적 관료행정체계에 복속된 농촌 행정조직은 아동 사회화같은 복잡하면서도 당장 긴급해 보이지 않는 문제에 관한 농민들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수용·해결해 줄 태세도 되어 있질 못하며, 이에 관해 중앙 국가기관에 압력을 가할 여력은 더욱더 없다. 농촌의 학교 역시 도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행정의 말단 조직으로서 지역공동체와는 괴리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역시 농촌 아동 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에 따른 세심하고 유연한 지도를 가능케 하지 않는다(농문연, 1994). 그렇다고 교사 개개인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

<표 7a> 청소년 본인이 장차 갖기를 원하는 직업

(단위: %)

응답 구분	농 촌			도 시			총 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농 업	3	0	2	0	0	0	1
상 업	4	4	4	7	3	5	5
금 용 업	3	3	3	3	2	3	3
기 술 직	27	4	17	10	3	7	12
교 육 자	6	19	12	6	18	12	12
예 술 인	2	6	4	7	22	14	9
군 인	3	2	3	1	0	0	2
언 론 인	3	7	5	8	10	9	7
정치·외교가	2	2	2	8	4	6	4
사회사업가	7	5	6	5	3	4	5
종 교 인	1	2	1	2	1	1	1
체 육 인	4	2	3	2	1	1	2
과 학 자	4	1	3	12	3	7	5
공 무 원	9	16	12	3	5	4	8
법 조 인	3	2	3	6	2	4	3
의 사	2	3	3	7	6	6	5
경 찰	4	3	3	1	1	1	2
연 예 인	5	11	8	4	7	5	6
기 타	9	9	9	11	11	11	10
전 체 (N)	100 (839)	100 (684)	100 (1523)	100 (802)	100 (766)	100 (1568)	100 (3091)

자료: 『청소년 의식 및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이화여대 농촌문제연구소, 1994: 84~85).

<표 7b> 청소년의 부모가 청소년이 장차 갖기를 원하는 직업 (단위: %)

응답 구분	농 촌			도 시			총 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농 업	2	1	1	0	0	0	1
상 업	2	1	2	5	1	3	3
금 용 업	3	5	4	3	2	3	3
기 술 직	22	2	13	8	2	5	9
교 육 자	9	30	19	10	31	20	19
예 술 인	1	3	2	3	17	10	6
군 인	2	0	1	1	0	0	1
언 론 인	1	2	2	4	6	5	4
정치·외교가	3	2	2	9	4	7	5
사회사업가	6	3	5	2	1	2	3
종 교 인	1	1	1	2	1	1	1
체 육 인	1	0	1	1	1	1	1
과 학 자	2	1	2	9	2	5	4
공 무 원	19	26	22	8	8	8	15
법 조 인	7	3	5	13	4	8	7
의 사	5	6	6	13	9	11	8
경 찰	3	1	2	1	0	1	1
연 예 인	2	3	2	1	1	1	1
기 타	8	8	8	9	10	9	9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	(838)	(683)	(1521)	(801)	(765)	(1566)	(3087)

자료: 『청소년 의식 및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이화여대 농촌문제연구소, 1994: 84~85).

농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중앙 국가관료들이나 전문 지식인들 역시 농민들의 자녀 사회화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도시 산업 위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업의 위축과 농민의 곤란을 불가피한 대가로서 합리화

함으로써 농민들이 적어도 자녀대에 있어서는 농촌을 벗어나고픈 욕망이 생기도록 만들어 왔다(장경섭, 1995). 도시 위주의 국가발전 전략은 단순히 산업시설만 도시에 편재시킨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육·문화·보건·여가시설들을 도시에 편재시킴으로써 농촌 아동들의 정상적 양육과 교육이 부모결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촌 아동들이 농민으로서도 일등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농촌 발전에 관한 사회적 이념을 제시·보급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농민인구 전체를 국가 발전 과정에서 소외자 내지 패배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념적 문제는 부주의한 상업 대중매체의 도시 미화적 광고·보도·드라마에 의해 농촌 문화환경이 왜곡됨으로써 더욱 심각성을 띠게 된 것이다.

농촌 아동들의 가족농 계승을 위한 사회화는 부모들의 자원, 지식, 의지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었으며 지역 공동체나 사회·국가도 문제의 보완이나 완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민들은 구태여 자식들을 농사꾼으로 만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시로 보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개척하기를 막연하나마 기대해 온 것이다.⁹⁾

V. 농가경제의 계승 및 유지 문제

앞에서 살펴 본 농촌 아동 사회화의 문제는 이미 가족농 체제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 어려움을 충분히 드러내 주고 있지만, 사회화의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가업 계승의 과정과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어 가

8) 한국의 경제발전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초한 것이라는 평가(메이슨 외, 1981)가 제기된 적도 있지만, 적어도 최근의 현실에서 그러한 평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뢰턴(Lipton, 1977)이 제기한 후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도시편향성(urban bias)'은 한국에도 예외없이 나타난 것이다(장경섭, 1995).

9) 허쉬만(Hirschman, 1970)은 조직이나 국가의 위기에 대한 성원들의 시장상황적 반응은 '항의(voice)', '이탈(exit)'로 나타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안정적인 '충성(loyalty)'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농민들이 스스로 이혼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농촌현실이나 정부의 농촌발전 정책에 대한 충성의 증거로 보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도시로 떠나는 자녀 세대를 통한 일종의 '간접적 이탈(indirect exit)'이 시도되어 왔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족농의 단절을 야기하고 있다. 농가경제 계승의 과정과 여건은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연구들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농가 및 지역공동체 수준의 사회학적 문제 몇가지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여기에서 지역공동체 수준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이유는 농촌 아동들의 주된 사회화 환경이 가족인 반면 농촌 청년들의 농민사회 및 농업경제 편입 과정이 지역공동체라는 사회생태학적 환경에 의해 근본적으로 영향받기 때문이다.

농촌 청년들이 농가경제 계승과 관련해 겪는 가장 보편적인 딜레마는 가업의 계승이 본인의 희망으로서나, 부모의 입장으로서나, 주변의 평가로서나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간주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도시 자본제 산업 위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갖가지 차별적 정치·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도 과잉인구 흡수와 식량 공급의 중역을 맡았던 가족농들의 내부 생존여건은 보편적으로 열악했고 갈수록 벌어지는 도시인들과의 생활 격차는 농민들의 집단적 패배의식을 조장했다(김일철 외, 1993).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에서 농민들은 그들의 직업에 대해 극히 일부만이 만족감을 표시했으며(인발연, 1988: 654), 그 장래성에 대해서도 극히 비관적이다(김일철 외, 1993: 50). 그리고 그들의 소득 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더욱 낮으며(인발연, 1988: 127), 특히 도시인들과의 소득 격차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김일철 외, 1993: 72). 비록 그들의 현재 소득수준이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오히려 앞으로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김일철 외, 1993: 74). 이처럼 일이 만족스럽지도 않고 소득이 충분하지도 않은 가족농의 가업을 승계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농촌 청년들에게 그다지 기꺼운 일이 될 수가 없다.

이같은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비관적 태도는 다른 직업종사자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 8>에 정리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은 직무, 작업환경, 근로시간, 임금, 직업장래성 등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심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불만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은 작업환경, 임금, 직업장래성에 대해 불만이 크며, 특히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불만도가 급격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직업 불만족은 도시지역의 서비스직 종사자와 생산/운수/장비/단순노무자들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표 8> 직업별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전문/기술 /행정관리 직 종사자	사무관련직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생산, 운수, 단순 노무	
직무 만족도							
1985	만족	88.4	49.4	30.4	27.6	14.6	25.6
	보통	27.3	40.8	50.3	50.1	54.3	52.8
	불만	4.3	9.8	19.3	22.3	31.1	21.6
1991	만족	69.1	46.2	34.5	23.9	14.7	25.7
	보통	23.3	41.1	43.7	46.1	53.8	48.5
	불만	7.6	12.7	21.8	30.0	31.5	25.8
작업환경 만족도							
1985	만족	57.6	52.5	33.5	30.1	15.5	22.7
	보통	33.0	38.1	51.6	53.0	56.0	49.5
	불만	9.4	9.4	14.9	16.9	28.5	27.8
1991	만족	35.4	35.5	20.3	16.9	6.2	9.3
	보통	43.5	47.0	56.7	51.3	46.2	38.3
	불만	21.2	17.5	23.0	31.8	47.6	52.4
근로시간 만족도							
1985	만족	34.2	27.0	15.6	11.7	6.3	11.2
	보통	42.4	44.2	41.6	39.7	46.7	40.3
	불만	23.4	28.8	42.8	48.7	47.1	48.6
1991	만족	36.4	28.6	21.8	15.1	8.3	15.4
	보통	41.8	41.6	39.8	38.1	50.8	44.8
	불만	21.8	29.8	38.4	46.8	41.0	39.8
임금 만족도							
1985	만족	34.7	23.0	17.4	15.2	14.5	14.1
	보통	30.2	35.3	40.8	38.6	43.6	37.0
	불만	35.1	41.6	42.0	46.2	41.9	48.9
1991	만족	25.2	19.5	17.2	11.9	9.6	13.4
	보통	35.5	36.3	38.5	36.8	39.8	33.2
	불만	39.3	44.2	44.3	51.3	50.6	53.4
장래성 만족도							
1985	만족	35.1	27.6	19.1	14.2	6.2	13.2
	보통	40.5	43.9	51.7	52.2	51.3	49.4
	불만	24.4	28.5	29.2	33.6	42.5	37.5
1991	만족	21.4	15.9	11.8	5.5	2.9	6.4
	보통	47.4	45.1	45.6	43.1	48.2	41.3
	불만	31.2	39.0	42.6	51.4	48.9	52.3

자료: 「1994년 사회통계조사」 결과(통계청, 1994: 84~88).

사실은 농민들에게 그다지 큰 위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농민들이 이농하는 경우 여성들은 서비스직에 남성들은 생산/운수/장비/단순노무직에 종사하게 될 확률이 제일 높으므로 이농 이후의 삶까지 비관적일 가능성이 심리적인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같은 이농 이후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여전히 이농의 유혹은 강한 것이다.

이는 농민들의 이농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는 본인의 자녀나 마을 청년들의 이농에 대한 견해를 묻은 질문에 조사 대상의 80.4%가 이농을 권장하며 이 비율은 40세 미만부터 60세 이상까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김일철 외, 1993: 44~45). 같은 조사에서 이농을 권하는 이유는 “농업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라는 항목이 압도적(67.5%)이었다. 1987년의 한 조사에서는 농민들이 이미 실제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주 이유로 과반수(55.0%)가 경제적 요인을 꼽고 있으며 기타 교육적 요인, 가족 사정 등을 들었다(설동훈, 1993: 78). 같은 조사에서 도시 이주 희망 가구의 비율은 59.5%에 달했다.

그런데 가족농의 가업이 급속히 유인력을 잃고 있는 원인들 가운데에는 농민들이 구조적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야기시키는 것들이 있다. 우선 생산여건 악화에 대응한 자기 착취의 강화 문제를 들 수 있다. 불안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복속된 농가경제는 농업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가격의 불안정성, 공산품과 농산품의 협상가격차(鉞狀價格差) 등의 중첩된 악조건에서 가족노동력의 착취 강화라는 개별적 대응을 보편화시켜 왔다. 경작규모 영세성의 지속, 농업소득의 열악 및 투자자본의 희소하는 만성적 악조건 속에서 노동강도의 증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응책이었다. 이는 가족원 개개인의 육체적 고통 증가뿐 아니라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에 긴장감과 불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홍주, 1992; 변화순, 1993; 김주숙, 1990; 조옥라, 1990). 이러한 문제는 특히 세대간의 갈등으로 번져 가족농 계승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족노동력 동원의 극대화를 위해 노부모가 과거의 은퇴 연령을 훨씬 넘어 농사에 참여하게 되면 자녀는 그만큼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 획득이 늦어지게 되어 이에 따른 ‘늙은’ 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한다. 아울러 과거에는 요긴한 가족노동력이었을 청소년들의 취학 등에 관련된 이촌으로 농촌 청장년은 나이가 들어서도 부림을 받기만 하고 행사하지는 못하는 지경

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다음 장에서 논의할 농촌 청년들의 혼인 어려움은 정상적 가정생활의 가능성마저 부정당하는 좌절감을 야기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농민들이 농업생산의 기회비용에 지나치게 민감해져 가족내의 각종 자원을 탈농화시키기 때문에 나타난다. 앞서 지적한 어린 자녀들의 도시 취학 및 영구 이촌은 결국 농가 일손 부족을 야기한다. 그리고 농업 수입 및 각종 보조금을 도시에 있는 취학·취업·구직·출가 가족원들에 대한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농업자본 부족 및 부채 발생·증가가 야기되어 왔다(김주숙, 1990: 267~68; 설동훈, 1993: 175~76). 토지의 이용·상속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족원의 이농·취학 비용을 위해 토지를 처분하거나 자산 가치만 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원 앞으로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일이 흔하다. 농민들이 그들 가족의 현재 및 미래의 복지 증진을 도시지향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농업생산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농가경제는 계승할만한 주요 생산수단이 결여된 껍데기로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가처분 소득·자본·토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중간계층 이상의 농민들에 해당된다. 영세농들의 경우, 소유 농지등 농업의 대물림을 위한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농의 단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 조사된 영세농(소유농지 0.5ha미만)의 16.8%만이 농사지를 다음 세대가 있고 나머지 83.2%는 가구주의 당대에서 영농이 중단될 것이라고 응답했다(정명채, 1992: 207). 그런데 영세농들의 경우는 자신이 빈농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농지도 제대로 없이 악전고투속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이농·이촌을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한다(조옥라, 1990: 294).

농가 자산의 분산 문제는 농민들의 재산 상속에 관한 관습·태도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1987년의 서울대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재산(농지 포함) 상속 대상으로 '장자' 24.8%, '아들들' 24.0%, '아들과 딸' 6.4%, '필요한 자녀' 7.6%, '기타' 9.3%로 나타났다(인발연, 1988: 95). 1992년의 김일철 등의 조사에서는 재산상속 대상이 '장남' 12.4%, '아들들에게 상속하되 장남 우대' 18.3%,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18.1%, '자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21.7%, '노후에 의지할 자녀 우대' 17.2%, '기타' 12.2%로 나타났다(김일철 외, 1993: 14). 그런데 뒷번 조사에서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농민의 응답은 '장남에게'가 4.9%에 불

과한 반면,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가 32.1%나 되었고, 대조적으로 60세 이상 농민은 '장남에게' 14.8%,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14.2%로 응답했다. 농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평등주의가 농가 자산의 분산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젊은 세대로 올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같은 재산상속관으로 인해 이미 영세한 농지의 소유구조가 더욱 영세해져 계승 가족농의 경제적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가 재산 상속 자녀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극심하다. 헌법(121조 1항)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이혼 자녀들에 대한 재산상속을 통해 유명무실화되어 왔으며, 농지가 사용가치보다는 (잠재적)자산가치에 의해 왜곡 배분되고 있다.

가족농의 계승을 위해 기존의 생산체계를 유지하는데에도 토지·자본·노동력의 규모와 비율에 관련된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새로운 대내·대외 개방적 경제환경에 적합한 조직·기술·정보가 전혀 축적·전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농촌 청년들이 겪어야 하는 난관들이 산재해 있다. 농촌 장·노년층은 과거의 자금 위주 및 부분 상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가족농의 유제를 물려주겠지만 이미 복잡한 관료 통제적 시장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있고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국제적 농업무역체제에 복속될 한국 농업의 경영은 근본적이고 급속한 체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민으로서의 지위와 자원을 가족을 통해 전수받는 거의 대부분의 청년 농민들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직적·기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농촌경제를 이어가야 한다.¹⁰⁾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농촌 청년들의 가족농 계승은 반드시 국가경제 전체나 지역경제 수준의 구조적 요인들이 아니더라도 개별 농가 차원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여기에 다른 수많은 연구들에서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영농 환경의 일반적 악화를 함께 고려하면 왜 농업의 대물림이 오히려 희귀한 현상이 되어버렸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농촌 청년들의 농가경제 계승에 대한 직접적 경제·사회·정치적 환경이 되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몇 가지 문제를 아주 간략히 짚고 넘어간다.

10) 일부 재벌들은 산하 연구소와 언론기관 등을 동원한 여론 조작을 통해 이같은 농민들의 생산조직·기술상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농업 진출과 농지 과점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

마을 등 지역공동체는 농촌 청년들이 자신의 가족내에서 성공적인 영농 계승의 조건을 찾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대체 조건을 모색해 볼 수 있는 환경이다. 우선 생산 조직에 관련해, 기존 농가내 가족노동력의 희소와 경영기법·자본력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청년들이 서로 협력을 모색하기도 하며, 실제 작목반에서 위탁영농회사 및 영농조합법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의 집단 협력조직들이 나타나기도 했다(최찬호, 1992; 안준섭, 1992). 이같은 새로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의 극감, 농촌 경제환경의 만성적 불안 등을 반영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새로운 공동생산자 문화를 형성하기는 커녕 두레 등 기존의 농번기 협업체제조차 붕괴되어 왔다. 여기에 관치 행정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새마을 운동 조직, 농협 조직 등이 농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자생적 재조직화 가능성을 사전 고사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했다. 특히 이장·면장에서 평통자문위원, 새마을 지도자, 조합장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지역 지도자들이 농민들의 욕구를 국가와 외부 사회에 대해 전달·실현시키는 지역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연고관계와 이해를 좇아 외부의 정치·행정·경제적 통제와 압력을 지역 사회에 전달하는 어용적 대리인(agent)으로서 기능한 경우가 허다했다(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한국카톨릭농민회, 1990).¹¹⁾ 이들은 농민 이익 증진을 위한 농촌의 재조직화를 원천 봉쇄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같은 정치·사회적 환경에 지역적 토지 소유구조의 왜곡, 농촌노동력 부족, 농자금 배분 왜곡 등의 생산자원 배치의 문제가 중첩될 때, 마을의 청년 몇몇이 모여 새로운 생산조직을 확립하는 등 적극적 영농 계승을 위한 농촌의 재구조화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여기에 얽힌 데 덮친 격으로 지나치게 가변적이고 비현실적인 농정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교란은 농민들이 국가의 거시경제적 조정에 의한 농업의 회생 가능성을 전적으로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농업체제에 대한 논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없이 쌀시장 개방을 약속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은 청년 농민들이 하루라고 늦기 전에 농촌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

11) 지난 1991년 구성된 지방의회의 경우 농촌 관치행정의 도구이기 보다는 견제장치로서 기능해 온 측면이 지역에 따라 나타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재량권의 한계로 농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장경섭·김인배·홍덕용, 1995).

따라서 현재 일부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의 청장년들이 있더라도 이들이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자생력을 갖는 농업생산자 계급을 형성할 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다. 그들 중 상당수가 '당장에는 도시에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등의 지극히 수동적인 이유로 농촌에 잔류하고 있는 잠재적 이농 인구이다(조옥라, 1990).

VI. 농촌의 여성 지위와 혼인 문제

농업생산뿐 아니라 부양·보호·교육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생활단위로서의 가족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내 부부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가업으로서의 농사를 계승하는 청년농민이 적절한 연령에 배우자를 맞지 못하거나 맞더라도 부부관계가 가족농의 생활양식에 조화롭게 통합되지 못한다면 가업 계승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족원 전체의 생활이 교란될 것이다. 농사 계승이 주로 남성 청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가족농의 사회조직적 계승을 위해 농민 청년들과 혼인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이 충분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의 대다수 젊은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같은 가족농 계승에의 참여를 회피하고 아예 농촌을 떠나는 선택을 해왔으며, 그 결과 가족농 계승을 결심한 소수의 청년들조차 배우자가 없어 생활의 모든 과정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이미 결혼한 농촌 부인들의 경우도 가능하면 농촌을 떠나 살자는 요구를 남편에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혼 적령기 농촌 여성들의 상대적 부족 문제는 인구·주택 센서스에 의해 집계된 농촌지역 성별·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결혼적령기를 여성 20~24세, 남성 25~29세로 가정했을 때, 1990년 센서스에서 도시지역(시부)의 성비(여성=100)가 100.90인데 비해, 농촌지역(면부)의 성비는 113.7로 나타났다. 이는 1985년 센서스 결과인 도시지역 성비 93.72, 농촌지역 성비 118.15에 비해 도시와 농촌 모두가 성비 왜곡 문제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같은 기간 동안 성비 왜곡의 주요 원인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여성들의 이혼 추세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미 농민

으로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한 농촌 청년들이 비자발적 독신상태까지 겹치자 자포자기적인 이혼 대열에 더욱 많은 수가 합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빈농일수록 통혼권이 면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면내, 즉 농촌 마을들에는 결혼적령기 여성이 드물어 결국 비자발적 독신의 고통이 빈농 청년들에게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한경혜·이정화, 1993).

김태현·홍문식·장영식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해 지역별,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동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장년 농민들의 비자발적 독신 문제가 최근들어 급격히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지역별·연령별 남자의 유배우율의 변동추이

(단위: %)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전국							
15-19	0.7	0.5	0.3	0.3	0.2	0.1	0.1
20-24	2.7	9.8	7.2	7.0	6.8	5.5	3.5
25-29	61.4	60.9	56.0	52.6	54.5	48.9	42.4
30-34	93.6	93.4	92.5	94.1	91.8	89.6	85.1
35-39	97.3	97.4	97.3	96.7	96.7	95.7	94.2
40-44	97.5	97.5	97.5	97.7	97.3	96.7	95.7
45-49	96.6	96.8	97.0	97.1	96.9	96.9	95.8
시부							
15-19	0.3	0.2	0.2	0.2	0.2	0.1	0.1
20-24	5.6	5.4	6.3	6.2	6.7	5.8	3.8
25-29	47.4	49.4	52.9	50.4	54.5	49.0	43.7
30-34	90.5	90.0	90.8	91.3	92.0	90.0	86.1
35-39	97.1	97.0	97.0	97.3	97.0	96.1	94.8
40-44	97.7	97.5	97.3	97.7	97.6	97.1	96.1
45-49	96.9	96.9	96.8	97.0	97.0	97.1	96.1
군부							
15-19	0.9	0.7	0.4	0.4	0.2	0.2	0.1
20-24	5.6	12.4	8.1	7.9	7.1	5.0	2.8
25-29	66.9	67.8	59.3	55.6	54.1	48.7	37.2
30-34	97.4	97.6	97.6	97.3	96.2	94.8	81.0
35-39	97.4	97.5	97.6	97.7	97.0	96.0	91.8
40-44	97.4	97.5	97.6	97.7	97.0	96.0	94.0
45-49	96.5	96.8	97.1	97.2	96.8	96.5	94.7

자료: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분석 결과(김태현·홍문식·장영식, 1993: 44).

1990년 조사에서 농촌지역(군부) 남자의 유배우율은 25~29세 37.2%, 30~34세 81.0%, 35~39세 91.8%로 나타나 마흔살이 가깝도록 배우자가 없는 남자가 10명 중 1명 가까이 된다. 1985년 조사에서 농촌 남자의 유배우율이 25~29세 48.7%, 30~34세 94.8%, 35~39세 96.0%이었음을 감안하면 불과 5년 사이에 문제의 심각성이 엄청나게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들을 도시와 농촌 사이에 비교할 때, 도시에서 교육기간 연장, 미혼여성의 취업 증가 등의 요인을 반영해 남녀 초혼 연령이 상승해 온 경향은 농촌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시에 비교한 농촌 남성의 비자발적 독신 문제는 이 수치들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다. 농촌 남성의 비자발적 독신이 결국 농촌 여성들의 도시 이주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감안할 때 도시 남성의 혼인은 그만큼 용이해졌을 수도 있다.

이처럼 젊은 농촌 여성들의 이동을 부추기는 요인은 기존의 경제학적 설명인 더 나은 소득기회의 회구(cf. Todaro, 1969) 외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포함한다. 많은 농촌 여성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농민가족의 빈곤을 그들의 남자 형제보다 더 과중하게 느끼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다(김주숙, 1990, 1994). 사소한 소비 과정에서부터 교육기회의 부여에 이르기까지 농촌 부모들의 남아선호를 체험해 온 이들에게 농민가족에서의 삶은 여성의 희생과 등식화되어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성장배경에 덧붙여 그들이 출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주위 농민가족들에서의 성인 여성의 삶으로부터 충분한 동경의 소재를 찾기가 어렵다.

많은 농촌 여성들은 우선 결혼기에 있거나 결혼기를 앞둔 입장에서 농촌의 전통적 가족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다. 학교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도시 중산층의 핵가족 문화를 동경하게 된 이들이 도덕적 권위주의하에서 농사 및 가사 노동자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기능적 측면만 강조되는 농민가족에서의 삶을 거부해 온 것이다(김주숙, 1990; 공세권 외, 1989). 즉 애정 위주의 부부관계 등 새로운 가족문화에 대한 욕구를 농촌의 청년들이나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충족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다. 최근의 조사연구들에 의하면, 농촌 여성에 대한 남편이나 (시)부모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서정적 의존관계라는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변화순, 1993). 그리고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의 부재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도시 핵가족적 기준으로 볼 때 농촌 가정생활의 문화적 질은 극

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농촌의 열악한 주거시설같은 가정생활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불만도 팽배해 있다(인발연, 1988: 147~50; 통계청, 1994: 188~89).

이같은 농촌 가정생활의 문화·물질적 조건의 열악성에 덧붙여 여성들의 가사 및 생산 노동이 그 양과 강도에 있어 갈수록 증가해 온 문제가 있다.¹²⁾ 가족이 거의 유일한 생활 보호·부양 단위로서 존재하는 농촌에서 노인 수발과 아동 양육의 역할을 여성들이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최근 아동기에 대한 도시적 내지 서구적 이념이 전파된 결과,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과거처럼 잔심부름 일손으로서 집안일을 거들게 하는 대신 장기간의 서정적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이에 따른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민학교 통폐합, 상급학교 부재 등으로 아동, 청소년 자녀의 통학, 하숙, 자취 문제가 대두되면 이에 따른 부모의 역할은 재정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몸소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과중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김홍주, 1992). 아울러 노인들이 과거보다 비교적 건강하고 장수하는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가사와 농사를 거들어주는 등의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한 노후 부양기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부담이 있다.

생산노동자로서의 농촌 여성의 부담은 더욱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학업 등으로 인해 청소년 일손을 동원할 수 없고 청년 남녀는 대부분 이농한 상태에서 특히 기혼 부인들이 대체 생산노동력의 역할을 강화해 와야 했다(김주숙, 1994). 여기에 그동안 농촌 소득원의 다원화 조류에 따라 농업에서는 원예작물 재배 등 주로 여성노동 집약적인 일거리들이 빠르게 늘어났다(김주숙, 1994).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등의 결과로 비농업부문에서의 계절적 단순노동 거리가 늘어나 특히 많은 기혼 부인들이 참여해 왔다(변화순, 1993). 농촌 여성들의 이같은 새로운 생산노동자 역할은 농가소득 증대라는 경제적 유인에 대응한 것이지만 여성들의 과중한 생산노동 부담은 농부증의 확산 등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이 아울러 있다(김홍주, 1992). 김일철 등(1993)의 조사에 따르면, 농촌 총각의 결혼난 이유로서 조사대상 농민의 43.3%가 '힘든 농사일'을 들었고 26.9%가

12) 메이야수(Meillassoux, 1981) 등에 따르면, (여기에서 지적될 한국농촌의 특수한 사정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농민가족이 여성들의 과중한 노동을 통해 한편으로는 생존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중적 착취상태에 얽매었다고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었는데,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점은 생산노동의 증가에 수반한 소득증대가 여성들에게 주는 유인은 증가된 노동부담의 역효과에 의해 상쇄될 것이라는 가능성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영농방식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 투자도 수도권 기계화 등 주로 남성 노동과 관련있는 사업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산노동을 경감하거나 효율화시키는 효과가 미미했다(김주숙, 1990, 1994; 조옥라, 1990).

많은 농촌 여성들이 동거하는 가족원과의 관계에 있어 생활부담을 느끼지만, 다른 다수의 여성들은 가족이 해체된 상태에서 독신으로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권태환·박영진(1993: 58)이 1990년 인구주택센서스의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45세 이상 여성가구주 가운데 49.1%가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해당 비율은 26.5%에 불과했다. 농촌 여성가구주의 82.4% 이상이 45세 이상임을 감안할 때, 농촌 여성이 가구주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경우 같이 사는 가족원 없이 홀로 생활을 영위해야 함을 뜻한다. 이 경우 일상적인 부양 대상 가족원이 없기 때문에 노동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노후 부양의 대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반대의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농촌의 독신 중·노년 여성들의 어려움은 곧 아래 세대 농촌 여성들에게 비판적인 삶의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

이처럼 농촌 여성들의 삶이 가족 내부에서 갈수록 힘겨운 것이 될 때 지역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들의 삶의 동기를 보완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나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인발연, 1988). 우선 가부장적 전통 촌락문화에서 젊은 미혼여성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찾기 어려우며, 그들을 위한 문화·교육·복지 시설은 공동체나 국가의 것이든 상업적인 것이든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그들의 세대문화가 개발되거나 수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기혼 부인들의 경우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이 보살피고 있는 아동과 노인을 위한 문화·복지·의료 시설 및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거의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비슷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조홍식, 1992). 그리고 가족 내부의 권위주의적 여성 차별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에서는 각 가족의 가부장제를 전제로 한 질서가 지배하고 있어(조옥라, 1990), 위의 문제들에 대한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대처 움직임이 생겨나기도 어렵다.

농촌 여성에 관련된 이같은 가족 및 지역공동체 차원의 문제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 근본적으로 완화된 사례들은 찾기 어렵다. 우선 농촌지역의 공동 문화·교육·복지·의료 시설 및 제도가 형편없이 낙후되거나 불충분한 것은 경제성장 일변도의 보수적 국정운영 기조하에 사회정책 일반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이 작용한 것이므로 사실 도시지역도 함께 안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관료주의적 행정의 안일한 도시편향성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그나마 존재하는 일부 사회정책적 투자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장경섭, 1992). 더우기 농촌 여성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농업생산 일변도의 농정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성(무관심성)이 심각한 정도의 것이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도 돌아올만한 유인책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방향의 충분한 변화를 아직 찾기는 어렵다. 최근 구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별도의 여성정책들조차 대부분 도시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계가 뚜렷하다.

VII. 농촌 위기의 성격과 개혁의 방향

한국의 농촌 위기를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의 기초적 조직 단위의 차원에서 살펴 보면 문제의 핵심이 가족농의 재생산체계의 와해에 있음이 드러난다. 농촌가구의 재생산 주기 단계별 분포를 볼 때, 이른바 축소기 및 해체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가족농체제는 그 미시조직적 기반이 와해되어 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울러 가족 재생산 주기의 각 단계인 아동의 양육 및 교육, 농가경제 계승과 혼인, 노후 부양 등의 과정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혼돈과 단절이 농촌의 기초조직인 농가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정상적 농가 없는 농촌의 총체적 퇴행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 가족농 재생산체계가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 붕괴는 최근의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국내 쌀시장 개방 결정이 있기 전부터 구조적으로 진행되던 현상이다. 여기에 다 쌀시장 개방의 직·간접 여파가 밀어닥치면 그 붕괴는 결정적으로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수천년의 한민족 농경사가 단절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같은 농가 재생산 주기의 와해라는 농촌위기의 미시조직적 과정(micro-organizational process)은 기존의 농촌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에서 충분한 체계적 분석의 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기존의 논의를 주도해 온 농민층 분해론이 농가 재생산체계라는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농가의 재생산 주기가 보편적으로 단절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양극분해론과 중농표준화론이 각각 제시하는 것처럼 농촌에 경작토지 면적상의 대농이나 중농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들은 조직 내적으로 안정된 자생력을 갖출 수가 없다. 따라서 그 결과로서 새로운 생산체계의 확립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기존 농가들의 재생산 주기상의 실패에서 새로운 기업가형 대농이 배태되기 위한 조건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경작규모의 확대로 중간층 농민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들은 반드시 시장경쟁력의 열위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체 조직의 인적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속적 분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중농표준화론과 전층하향분해론은 당장의 농가별 평균 경작규모에 대해 서로 상이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중농이든 영세농이든 조직적 자생력을 갖는 새로운 생산체제로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민층 분해의 궁극적인 위기는 여전히 대두되는 것이다.

농가 재생산 주기라는 농촌 위기의 미시조직적 과정에 대한 간과는 정치·행정 작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그동안 농촌 위기의 타개를 위해 1980년대 이후 정권의 사활이 달린듯한 문제 제기와 지원 대책이 반복되어 왔다. 그런데 그동안의 문제 진단은 농촌 문제를 농업의 물리적 생산요소로서의 토지·노동·자본 사이의 전체적 균형문제로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조직·기술·정보 같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무형적 생산요소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 특히 조직의 문제는 농가 재생산체계의 와해를 유의해 볼 때 농촌 문제의 진단 및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지만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농가라는 조직 단위들이 재생산 주기의 단절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체계는 붕괴를 피하기가 어렵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들은 극히 최근까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기존 자작소농의 계속적 보호나 대규모 기업농 체제의 확립 필

요성에 관한 산발적인 논의가 제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도 토지·노동·자본의 상대적 및 절대적 소요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생산조직의 확립이나 재생산을 위한 다양한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다. 즉 자작소농 보호론도 막상 농가 재생산 주기의 총체적 단절이라는 극명한 현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극복할 것인지의 문제는 덮어두고 단순히 도·농간 자원 분배등의 측면에서 즉각적인 농민 이해의 보호를 내세우는 한계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업농체제 확립의 의견도 정치·사회·경제적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농지의 소유·사용권 개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경작 규모의 획기적 확대만 내세울 뿐, 그러한 기업농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데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책임성 있는 논의를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농정 및 농학의 한계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농촌 위기가 더욱 다급해진 상황에서도 쉽게 극복되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김영삼 정권 초기부터 주창되어 온 이론과 정책으로서의 신농정은 농촌의 기본 생산·생활 조직체의 보강, 개편 혹은 대체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결여한 채 선진 자본주의 농업에 대항한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을 수년내에 확립하겠다는 공허한 구호 이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¹³⁾ 농민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존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온 가족농의 조직적 재생산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대를 달리하는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선진 자본주의 농업에 경쟁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불과 수년내에 확립하겠다는 넌센스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¹⁴⁾ 기본

13) 차야노프의 논의를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확장하는 프리드만(Friedmann, 1978)의 논의를 빌리면, 가족농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속에서도 특수한 조직원리를 통해(자본제 부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산업부문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가능성은 사실 유럽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전히 가족농이 농업선진국들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서 증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문제는 국제환경의 악화와는 별개로 가족농 내부의 조직적 재생산체계가 붕괴되는 것이어서 프리드만의 논의에서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14) 다행히 1994년에 많은 농민운동가들까지 참여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마련해 준 정부에 건의 한 농정개혁안에는 지금까지의 정책 오류가 상당 부분 지적되고 많은 진향적인 사회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어 제대로 시행되면 바람직한 결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농어촌발전위원회, 1994). 특히 농촌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대책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농촌의 지역적 특수성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생산자계급과 생산조직의 안정화, 나아가 획기적 현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생산·생활 조직상의 농민 실태가 무시된 허구적 가정들(false assumptions)에 근거해 세운 농촌 발전론은 나름대로의 내적 논리는 가질 수 있으나 역사·사회적 적합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근본적인 농정개혁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촌의 현실은 기초 생산·생활 조직의 차원에서 급격한 해체는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농가 재생산 주기가 아동의 양육 및 교육, 농가경제 계승, 혼인과 결혼생활 등의 모든 단계에서 혼돈과 단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소규모 가족농체제의 해체는 근본적으로 완화되거나 중지될 것 같지는 않다. 더우기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세계 자본주의 농업 무역체제에서 국내 자작소농체제가 자생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산조직 차원에서의 농촌문제의 대처는 기존 농가 재생산 주기의 붕괴에 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대응요법을 동원해 가족농 해체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보완적 조치로서 새로운 기업농 또는 조합농 체제의 확립에 관계된 사회적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구조화를 촉진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가족농 해체에 관한 대응요법들은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농가 재생산 주기별 문제점들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다. 기업농·조합농 체제의 확립을 위한 재구조화의 과정을 조직의 재생산 주기에 유념하여 간략히 지적하면, 새로운 사회적 태도와 경제적 기능을 갖춘 농민층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재교육, 생산조직의 형성·유지·발전을 위한 인적 결합·충원·대체, 은퇴 농민의 노후 사회생활 및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적 부양기제 확립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 재구조화의 조건 하나 하나는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과 실행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행정적 지도·명령이나 단기적인 금전적 유인에 의해 충족될 성격의 것들이 아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과정은 반드시 농민들 자신의 생활 체험에 근거하지 않으면 파악될 수 없는 것이므로 농민들 자신의 자율적 재구조화 노력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관료와 학자는 정보 제공같은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재구조화는 많은 시행착오를 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촌 사회·경제에 대한 국가적 보호는 많은 부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세권 외(1987), 『한국가족구조의 변화-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_____ (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태환(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2: 39~56.
- _____ · 박영진(1993), 『한국인의 가구 및 가족유형』, 서울: 통계청.
- 김수석(1994), 「차야노프의 '농촌가족경제' 이론에 대한 한 연구」, 『농촌사회』 4: 271~94.
- 김응석 외(1993), 『농촌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가족부양체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일철 · 김태현 · 김홍주(1993), 『한국농민의 불안과 희망-1992년 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주숙(1990),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와 가족: 1976-87」,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Pp.249~82.
- _____ (1994),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김태현·홍문식·장영식(1993),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서울: 통계청.
- 김홍주(1992), 「현단계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가족문제」, 『농촌사회』 2: 85~143.
- 농어촌발전위원회(1994), 「농정개혁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대책」, 농어촌발전위원회 대통령 보고문.
- 메이슨, E. S. 외(1981),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변화순(1993), 「한국 농촌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농촌사회』 3: 127~56.
-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1988), 「산지 및 산촌지역개발을 위한 발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부·농업진흥공사 용역 연구보고서.
- 설동훈(1993), 「한국 농촌의 가족구성과 생활실태」, 『농촌사회』 3: 157~84.
- 안준섭(1992), 「영농법인에 관한 일고찰 -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 355~96.
- 이가옥 외(1989a),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_____ (1989b),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1994), 『한국 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장경섭(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 - 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15: 173~204.
- _____ (1995), 「가족농체제의 위기와 농촌개혁의 전망 - 90년대 농촌현실의 사회학적 평가」, 『농촌사회』 제5집: 195~226.
- _____ · 김인배 · 홍덕용(1995), 「지방화와 농민의 역할」, 농정연구포럼 제21회 월례세미나 발표문.
- 정명채(1992), 「농촌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 『농촌사회』 2: 193~234.
- 조완규(1994),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4: 73~96.
- 조옥라(1990), 「도시빈민 가족과 농촌 영세빈농 가족의 비교」,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Pp.283~99.
- 조흥식(1992), 「한국 농촌사회의 복지문제-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 259~80.
- 최양부(1986), 「농가경제의 동태적 변화와 F-사이클 가설」, 『농촌경제』 9(4): 33~46.
- _____ · 오내원(1992), 「농촌가족의 해체와 소멸」, 『가족학논집』 4: 175~94.
- 최찬호(1992), 「작목반 협동의 본질과 전개방향」, 『농촌사회』 2: 309~54.
- 통계청(1994), 『한국의 사회지표 1994』, 서울: 통계청.

한경혜·이정화(1993), 「농촌지역의 통혼권 변화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3: 215~42.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한국카톨릭농민회(1990),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농민』, 서울: 연구사.

Aries, Philippe(1962),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Chayanov, Alexander V.[1925](1986), *Theory of the Peasant Econom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Friedmann, Harriet(1978), "World Market, State, and Family Farm: Social Bases of Household Production in the Era of Wage Labor,"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0(4): 545~86.

Hirschman, Albert(1970),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Lipton, Michael(1977), *Why Poor People Stay Poor: Urban Bias in World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eillassoux, C(1981), *Maidens, Meal and Money: Capitalism and the Domestic Commu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odaro, Michael(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138~48.

